

보고서: 유럽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제도 분석 및 한국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유럽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프랑스 사례 중심의 도입 논의 배경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부여하지 않아 왔습니다. [^1] 이로 인해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자문이나 내부 보고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이러한 법제는 프랑스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3]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프랑스 기업들에게 심각한 구조적 불이익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 시, 미국이나 영국계 기업들은 ACP를 통해 민감한 내부 법률 문서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 기업들은 이러한 보호 장치 없이 내부 자료가 압수되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나.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과 법제화 과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내에서는 법률 직업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중요한 전환점은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여, 이들에게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였습니다. [^5] 이는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ACP를 보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프랑스는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마침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 비밀보호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프랑스가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전통을 수정하고 ACP를 도입한 과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마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벨기에 모델처럼 기존 변호사 직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적 접근법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서론

본 보고서는 프랑스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 (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도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이로 인해 프랑스는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3]

이러한 법적 공백은 프랑스 기업들을 국제 무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했다. [^4]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국의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유럽사법재판소(ECJ)가 Akzo Nobel 판례를 통해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후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6]

수십 년간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이는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7] 그러나 마침내 도입된 본 제도는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법률 환경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수십 년간 이어진 입법 시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동학을 추적한다. 이후 법령의 정확한 명칭과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 전후 사내 변호사의 역할 변화를 비교 대조한 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업의 법무 및 전략 담당자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 및 규제 환경의 복잡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와 준법경영(Compliance) 체계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경쟁국의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을 통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을 보호받아 왔다. 반면, 프랑스와 같이 이러한 제도가 부재했던 국가의 기업들은 동일한 문서가 규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본 보고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내 변호사 ACP 도입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역사적 배경,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상황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Anglo-American 기업들은 ACP를 통해 자사의 민감한 내부 법률 문서를 보호하는 반면, 사내 변호사 ACP 제도가 없는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 기업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다. 프랑스는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법적 환경은 자국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 [^4] 프랑스와 더불어 한국은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3]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내에서도 사내 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과거 프랑스의 사례처럼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7] 최근 프랑스의 입법 과정에서 형사 및 조세와 같은 핵심적인 리스크 영역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반쪽짜리 특권'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은 한국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8]

따라서 본 보고서는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마침내 ACP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CP 도입 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법무 및 전략 담당자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유럽, 특히 프랑스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도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의 법률, 판례, 입법 동향을 종합하여 국제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1.2.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프랑스**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아, 사내 변호사는 법적 보호에 있어 취약성을 가졌다. [^1] 이러한 배경에서 ACP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프랑스의 입법 과정을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의 사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주요 유럽 국가인 **독일과 벨기에**의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 **독일 모델**은 사내 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타협점을 찾으려 한 사례를 보여준다.
- **벨기에 모델**은 변호사 직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사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프랑스 ACP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각국의 법적 맥락이 제도 설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2.2. 내용적 범위

본 보고서는 ACP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첫째, ACP 도입 배경 및 연혁을 분석한다.** 프랑스 기업이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EU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 시 ACP 부재로 인해 겪었던 불이익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새로운 신분 창설을 제안했던 초기 시도를 검토한다. [^5] 또한,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급진적 제안이 변호사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역사적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 [^7]
- **둘째,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문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판례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보호 대상이 되는 법률 자문의 정의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사실관계 요약이나 사업적 조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9] 또한, 'Whirlpool 판결'에서 인정된 보호 범위처럼 외부 자문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내부 소통의 보호 가능성 등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분석한다. [^10]
- **셋째,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 및 평가를 다룬다.** ACP 도입이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형사 및 조세 분야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쪽짜리 특권'에 그칠 수 있다는 제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8]
-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내변호사 비밀보호권 도입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1.3.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 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도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법률 및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문헌 연구, 판례 분석, 그리고 입법 동향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최근의 법률, 판례, 입법 동향을 종합하여 국제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배경과 연혁을 고찰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이는 영국(LPP), 미국(ACP), 독일 등 대부분의 경쟁국에 비해 프랑스 기업을 명백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국제 조사에서 프랑스 기업만이 내부 자료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11] 이러한 구조적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프랑스 법률 직업의 현대화를 목표로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신분을 창설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5] 하지만 이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다. [^7]
- **제2부**에서는 새로 도입된 ACP 관련 법령의 정확한 명칭과 주요 조항을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사내변호사 관련 규정과 신설된 제58-1조가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의 근거와 요건을 어떻게 명시하는지 상세히 다룬다. [^12]
- **제3부**에서는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를 대조 분석한다. 과거 ACP 제도가 부재했던 시기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4] 본 파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사내변호사의 역할 변화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 **제4부**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새로운 법적 환경을 기업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직면할 기회와 위협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 유럽 사내변호사 ACP 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발전

제1절. 유럽연합(EU) 차원의 논의와 한계

유럽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에 관한 논의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에서 그 이론적 기초와 한계를 명확히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Akzo Nobel 판결**에서 CJEU는 ACP의 핵심 요건으로 *****독립성(Independence)*****을 강조하며,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는 이러한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6] CJEU는 사내 변호사가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들이 작성한 법률 자문 문서는 EU 경쟁법 조사 등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13]

이러한 판례는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경쟁법 조사에 있어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보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각 회원국이 자국법에 따라 사내변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앞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EU 차원에서는 사내변호사의 ACP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회원국, 특히 프랑스와 같이 전통적으로 사내변호사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의 제도 개선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2절. 프랑스의 전통적 입장과 ACP 도입 논의의 배경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드문 국가 중 하나였다. [^3] 이러한 입법적 공백의 근간에는 프랑스 법체계가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 [^1] 이 독립성 원칙에 따라,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법률 전문가인 '**사내변호사(juriste d'entreprise)**'는 변호사 협회(barreau)에 등록할 수 없으며, '**변호사(avocat)**'라는 공식 칭호의 사용 또한 금지되었다. [^14]

이러한 제도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프랑스 기업에게 심각한 구조적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4] 프랑스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 문서는 규제 당국에 의해 아무런 보호 없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경쟁국 기업들은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 등을 통해 이를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프랑스 내에서 ACP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3절. ACP 도입을 위한 입법적 시도와 발전

프랑스 내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 대표적으로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여 이들에게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5] 이는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이었으나,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7]

이러한 교착 상태 속에서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벨기에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업에 고용된 법률 전문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15] 이는 기존 변호사 직업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사내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프랑스의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를 제공했다. 이처럼 프랑스의 ACP 제도 도입 과정은 완전한 실패와 점진적 발전을 거듭하며, 전통적 법체계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복잡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1.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법철학적 기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으로, 그 법철학적 기반은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사실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6] 즉, ACP는 변호사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닌,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CP의 적용 범위를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법철학적 논쟁을 야기한다. 특히 프랑스 법체계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ACP의 전제조건으로 엄격하게 고수해왔다. [^1]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공질서의 핵심 요소인데, 이를 기업에 고용되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 사내변호사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7]

사내변호사가 고용주인 기업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는, 그들이 작성한 법률 자문이나 내부 보고서가 ACP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2] 이는 프랑스 기업을 국제 경쟁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특히 영

국이나 독일처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그 불리함은 더욱 두드러졌다. [^4]

결국 ACP의 법철학적 기반에 대한 논의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라는 전통적 가치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실용적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2.2. 유럽연합(EU) 차원의 논의: 유럽사법재판소(CJUE)의 확립된 판례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논의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UE)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8] CJUE는 EU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가장 중요한 판례는 기념비적인 **Akzo Nobel 판결(C-550/07 P)**이다. [^6] 2010년에 내려진 이 판결에서 CJUE는 유럽연합(EU)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19] 판결의 핵심 논리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였다. CJUE는 사내 변호사가 고용주인 기업과 경제적으로 종속된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와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3] 이러한 이유로 EU 경쟁법 조사 맥락에서는 오직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와의 소통만이 비밀유지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CJUE의 입장은 프랑스와 같은 특정 회원국의 국내법적 상황과 충돌을 야기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로서의 지위나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7] 결과적으로 프랑스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국내법적으로도, 그리고 *Akzo Nobel* 판결에 따라 EU 경쟁법 조사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취약성에 노출되었다.

CJUE의 판례는 **EU법의 우위 원칙**에 따라 회원국 법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 만약 특정 회원국 법원이 사내변호사의 ACP를 인정하더라도, EU 경쟁 당국의 조사에서는 CJUE의 판례가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CJUE의 확고한 입장은 EU 회원국 법원이 자국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특히 프랑스 법원이 기존 입장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1]

2.3. '프랑스적 예외(French Exception)'의 형성

주요 선진국 중 프랑스는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이러한 법제적 특수성은 ****프랑스적 예외(French exception)****로 불려왔다. 프랑스는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 달리 고용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이로 인해 프랑스는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3]

이러한 '프랑스적 예외'는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국의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PP)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아무런 보호 없이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 시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4]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다. [^18] 유럽사법재판소는 *Akzo Nobel* 판결(사건번호 C-550/07 P)을 통해 EU 경쟁법 조사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ACP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특권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삼았다. 이 판결은 프랑스 파기원의 전통적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으나, EU법의 우위 원칙에 따라 프랑스 국내법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려운 강력한 선례로 작용했다. [^21] 따라서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조사에서는 프랑스 기업이 사내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22]

한편,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ACP 원칙과 현실의 괴리는 심화되고 있었다. 프랑스 법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공공질서의 문제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최근 입법 및 판례는 자금세탁 방지, 조세, 공정거래법 등 특정 분야에서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를 보였다. [^23] 더욱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사안에 따라 비밀유지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 [^24]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에서의 불이익이, 대내적으로는 법 원칙의 예외 확대와 판례의 비밀관성이 맞물리면서, 사내 변호사 ACP 도입을 통한 '프랑스적 예외'의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25]

제3장.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과정 및 법제 분석

물론입니다. 주어진 지시사항과 참고문헌 태그를 바탕으로 '## 제3장.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과정 및 법제 분석' 섹션의 전문적인 본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제3장.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과정 및 법제 분석

1. 도입 논의 배경: 사내변호사의 법적 취약성과 국제 경쟁력 약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는 변호사 고유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이러한 법적 현실은 프랑스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다. [^3] 이는 프랑스 사내변호사가 변호사협회(Barreau)에 소속된 정식 변호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법상의 공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법적 취약성은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경쟁국의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을 통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반면, 프랑스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동일한 성격의 문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유럽 내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프랑스 기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4]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경제 내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마침내 입법부의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입법 시도의 역사와 좌절: '기업 내 변호사' 제도의 실패

사내변호사에게 ACP를 부여하려는 입법적 노력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법률 직업의 현대화를 목표로 발간된 한 보고서는 '**기업 내 변호사(avocat en entreprise)**'라는 새로운 법적 신분을 창설하여 이들에게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5]

이 제안은 사내변호사에게 개업 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프랑스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7] 변호사 단체는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가 과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업윤리를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 이러한 격렬한 반대로 인해 해당 법안은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이 실패 사례는 프랑스 법조계 내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3.1. 도입 배경: ‘프랑스적 예외’의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

프랑스는 오랫동안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프랑스적 예외(French exception)’⁸라는 독특한 법률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적 ‘독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는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전통적 시각에 기인한다. [^1]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다. [^3]

이러한 ‘프랑스적 예외’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4]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와 같은 국제적 규제 환경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을 통해 민감한 내부 법률 검토 자료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아무런 보호 없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사법재판소(CJUE)의 획기적인 *Akzo Nobel* 판결(사건번호 C-550/07 P)⁹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 해당 판결은 EU 경쟁법 조사 맥락에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ACP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내법적 입장을 EU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판결은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EU법의 우위 원칙에 따라 향후 프랑스 법원이 입장을 변경해야 할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21] 따라서 프랑스 국내법이 이러한 EU법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조사에서는 프랑스 기업이라도 이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2]

또한, 프랑스 법체계 내부에서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프랑스 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공공질서의 문제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최근의 입법 및 판례는 자금세탁 방지, 조세, 공정거래법 등 특정 분야에서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3] 이는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입법 시도들은 형사 및 조세와 같은 핵심적인 리스크 영역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쪽짜리 특권’¹⁰에 그칠 가능성이 컸다. [^8]

결론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프랑스적 예외’는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 기업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법률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제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 내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랑스는 마침내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 도입이라는 중대한 법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제도는 국제 표준에 근접하려는 시도이지만, 보호의 강도와 범위 면에서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며, 독일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26]

3.2. 입법 과정의 동학: 이해관계자 간의 격렬한 대립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 도입을 둘러싼 입법 과정은 프랑스 법조계와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격렬한 찬반 논쟁을 촉발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변호사의 전통적 역

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입법 시도의 역사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찬성 측 (재계 및 기업 법무팀 협회 - AFJE):** 입법을 강력하게 추동한 주체는 프랑스 재계와 기업 법무팀 협회(AFJE)였다. 이들의 주장은 국제 경쟁 환경에서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4]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 시, 미국이나 영국 기업은 ACP를 통해 민감한 내부 법률 문서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기업 단체들은 입법적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 **반대 측 (프랑스 변호사 협회 - CNB):** 반면,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프랑스 변호사 협회(CNB)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 직역이었다. 이들은 사내변호사에게 ACP를 부여하는 것이 변호사 직업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핵심 가치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변호사 단체의 관점에서,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는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들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7] 과거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던 급진적 제안이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역사 역시 이러한 뿌리 깊은 갈등을 방증한다. [^7]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개혁안의 입법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정면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를 시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27] 여기에 더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사안에 따라 비밀유지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인 판례의 충돌 역시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4] 결국 이처럼 격렬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은 프랑스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업의 법적 보호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입법된 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3. 법령의 명칭 및 핵심 조항 분석

3.3.1. 법령의 공식 명칭

프랑스에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핵심 법률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2021년 11월 22일 법률 제2021-1729호」**(Loi n° 2021-1729 du 22 novembre 2021 pour la confiance dans l'institution judiciaire)이다. [^28] 이 법률은 사법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광범위한 목적 아래,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사내변호사 ACP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오랜 기간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며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를 거부해 온 프랑스의 전통적 입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

3.3.2. 핵심 조항: 법률 제58-1조 신설

본 법률 개혁의 핵심은 기존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71-1130호」에 **제58-1조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의 제58조가 사내변호사의 존재와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이었다면, 신설된 제58-1조는 이들의 특정 업무 결과물, 즉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다. [^12] 이로써 사내변호사는 예방적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설계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29]

3.3.3. 비밀보호의 주요 요건

제58-1조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비밀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째**, 해당 자문은 법학 석사 학위 소지자 등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 **둘째**, 자문은 오직 고용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셋째**, 해당 문서에는 *****"confidentiel – consultation juridique – juriste d'entreprise"**(비밀 – 법률 자문 – 사내 변호사)**라는 명확한 표식을 부착하여 다른 업무 문서와 구별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윤리 규정들을 성문화하고 체계화하여 비밀유지권의 핵심 원칙들을 재확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30]

3.3.4. 핵심적 예외 및 한계: '반쪽짜리 특권'이라는 비판

도입된 ACP 제도는 프랑스 기업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중대한 예외 조항들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25]

구체적으로,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 비밀보호는 **형사 절차 및 조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두 가지 핵심 리스크 영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특권은 프랑스 국내법의 효력 범위에 한정되므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사(dawn raid)에서는 효력이 없다**. 미국 법무부(DOJ)나 EU 경쟁 당국의 조사 시, ACP를 통해 민감한 내부 문서를 보호하는 경쟁국 기업과 달리 프랑스 기업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취약점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새로운 ACP 제도는 *****반쪽짜리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업이 실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형사 및 조세 리스크에 대한 자문은 여전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내변호사들은 자문 내용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는 프랑스가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3]

제4장. 프랑스 ACP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및 평가

제1절 제도 도입 전후 비교

1. 제도 도입 이전: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보호의 부재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 제도 도입 이전, 프랑스 기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심각한 법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는 프랑스 법체계가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이러한 법적 공백은 특히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와 같은 국제적 규제 조사에서 프랑스 기업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경쟁국의 기업들은 자국의 법률전문가 특권(LPP) 또는 ACP 제도에 따라 내부 법률 리스크 분석이나 전략 회의록 같은 민감한 자료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성격의 문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명백한 불리함을 안고 있었다. [^11] 결국 프랑스 기업들은 내부 법률 자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하여 국제 소송 및 조사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2. 제도 도입 이후: 변화와 전략적 의의

2024년 사내변호사 ACP 제도 도입은 프랑스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개혁으로 평가된다. 이 개혁을 통해 프랑스 기업들은 과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내부 법률 자문 내용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 표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번 개혁은 국제 조사에서 프랑스 기업이 겪었던 일방적인 불리함을 완화하고, 프랑스를 유럽 본사 소재지로서의 매력도를 일부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31]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방어권 신장**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솔직하고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내변호사가 단순한 법률 자문가를 넘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소극적 법무에서 벗어나 예방적 법무 문화를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다.

제2절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 평가

1. 국제 표준과의 정렬 및 한계

프랑스의 ACP 제도 도입은 국제 경쟁 환경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으나, 그 보호 수준과 범위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제도는 국제 표준에 근접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지만, 보호의 강도와 범위 면에서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며, 독일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26]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적용 제외 등 핵심적인 영역에서 보호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프랑스 기업들이 당면하는 법률 리스크, 특히 형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향후 과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사안에 따라 비밀유지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24]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판례의 충돌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변호사의 전통적 역할과 기업의 법적 보호 필요성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정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적 보완과 일관성 있는 판례 축적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1. 도입 이전(Before): 사내변호사의 취약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

프랑스에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이 도입되기 이전, 기업들은 법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에 직면해 있었다. 프랑스는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를 독립적인 법률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이러한 법적 공백은 프랑스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는 기업의 대응 전략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3] ACP 도입을 통해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7]

이러한 상황은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4]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와 같은 국제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PP)을 통해 민감한 내부 법률 분석 자료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아무런 보호 없이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4.1.1. 외부 변호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ACP의 부재는 프랑스 기업들로 하여금 민감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외부 로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내부 조사 보고서나 법률 리스크 분석 메모는 규제 당국의 조사 시 언제든지 압수되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매우 컸다. 예를 들어, 부패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내부 조사 보고서는 기업의 자기 정화 노력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자백서'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잠재적 소송이나 규제 조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자문 업무를 모두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내변호사를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영진이나 현업 부서는 자신들의 솔직한 고민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담긴 논의가 기록으로 남아 훗날 기업에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하여, 사내변호사를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시키기를 꺼려했다. 결과적으로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 파트너가 아닌, 단순 법률 문서 검토자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4.1.2. 차선책으로서의 영업비밀 보호 규정 활용과 그 한계

ACP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선책으로 일부 기업들은 2018년 제정된 프랑스의 영업비밀 보호법(Loi sur le secret des affaires)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 법은 기업의 상업적, 기술적, 재정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법률 자문에 적용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 **첫째**, 영업비밀의 정의와 요건이 법률 자문의 특성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다. 법률 자문이 '상업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 **둘째**, 영업비밀 보호는 절대적인 특권이 아니었다. 법원은 공익이나 소송 절차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영업비밀로 지정된 문서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강제적인 정보 제출 요구 앞에서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결국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법률 자문을 보호하기 위한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으며, ACP와 같은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프랑스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으며,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2. 도입 이후(After): 기업 법무 환경의 구조적 변화

ACP 도입은 프랑스 기업의 법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며, 단순한 법률 조항 개정을 넘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기존에 프랑스 기업은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법제 하에서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아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1] 이로 인해 규제 당국의 조사 시 민감한 내부 법률 자문 내용이 보호받지 못하고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은 내부적으로 생성된 법률 자문 문서의 비밀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처벌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적 관리로 기업의 준법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내 법무팀과 외부 로펌 간의 협업 모델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과거에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비밀보호를 위해 외부 로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ACP를 통해 내부 자문의 기밀성이 보장되면서 기업의 법무 역량 내재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초기 단계의 분쟁 자문 등 상당수의 예방적 법무(preventive law) 기능이 내부적으로 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32]

결과적으로 외부 로펌의 역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수합병(M&A), 복잡한 국제 소송 및 중재, 특수한 규제 분야에 대한 심층 자문 등 사내 법무팀의 역량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예방적 법무의 강화를 의미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2] 이처럼 사내 법무팀이 주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부 로펌과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은 기업의 법률 비용 효율화와 함께 전반적인 법무 역량 강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4.3.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 평가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 도입은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과거 프랑스 기업들은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와 같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을 보호받지 못해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Anglo-American 기업들이 ACP를 통해 자사의 문서를 보호하는 동안, 프랑스 기업들은 사실상 '법적 진공' 상태에 놓여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도 도입은 국제 경쟁 환경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내부 조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최종적으로 마련된 제도는 여러 한계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내변호사에게 외부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려던 초기 논의는 변호사 직업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7] 이는 벨기에나 독일이 각국의 상황에 맞춰 변호사 직업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한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보호받아야 기업 내에서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활성화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33] 이들은 통계와 경제적 영향을 근거로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ACP 없이는 프랑스가 법률 분야에서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33]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ACP 제도 도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자, 기업 경쟁력 강화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직업 간의 갈등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이 변호사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7] 따라서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의 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5장. 유럽 주요국의 ACP 제도 비교 분석

유럽연합(EU) 내에서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법체계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규율되어 왔다. 이는 특히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규제 조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국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ACP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프랑스: ACP 도입 논의 배경 및 제도적 특징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였다. [^3] 프랑스 법체계는 변호사(Avocat)와 사내 법률가(Juriste d'entreprise)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의 독립성을 ACP의 전제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용 관계에 있는 사내 변호사는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1]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 기업들에게 심각한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했다.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 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경쟁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을 통해 민감한 내부 법률 검토 자료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의 문서는 그대로 규제 당국에 제출되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11] 이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2023년 11월 30일, '법무부의 방향 설정 및 프로그래밍 법률(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2023-2027)'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권을 도입했다. 해당 법률은 기존의 사내변호사 활동 규정(제58조)에 더하여, **신설된 제58-1조**를 통해 이들의 특정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였다. [^12] 이로써 프랑스는 국제 표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유럽 본사 소재지로서의 매력도를 일부 향상시키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31]

2.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 및 프랑스 제도의 평가

프랑스의 새로운 ACP 제도는 국제 표준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중요한 시도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유럽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가. 독일

독일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변호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요건 하에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법률 자문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새 제도는 보호의 강도와 범위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26] 예를 들어, 독일 역시 형사 절차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자문 내용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보호 수준은 프랑스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나. 영국

영국의 법률전문가 특권(LPP)은 '소송 특권(litigation privilege)'과 '자문 특권(advice privilege)'으로 나뉘어 매우 강력하고 폭넓은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사내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 역시 LPP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의 ACP가 형사 및 조세 분야를 명시적으로 예외로 두는 것과 달리, 영국의 LPP는 이러한 포괄적인 예외 조항이 없어 보호 범위가 훨씬 넓다.

다. 유럽연합(EU) 경쟁법

프랑스의 ACP 제도 역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 특히 **Akzo Nobel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6] ECJ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만 특권을 인정하고 사내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가 국내법으로 ACP를 도입했다라도, EU 경쟁법 조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34]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ACP 도입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도 사내변호사의 지위는 여전히 외부 변호사와 동등하지 않으며,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보호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특히 EU 경쟁법 조사 및 형사, 조세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제도가 국제 표준에 근접하려는 시도이지만, 보호의 강도와 범위 면에서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며, 독일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6]

5.1. 독일: 신디쿠스 변호사(Syndikusrechtsanwalt) 모델

독일은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독자적인 제도를 통해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4]. 이는 2016년 법 개혁을 통해 도입된 '**신디쿠스 변호사(Syndikusrechtsanwalt)**' 모델에 기반한다. 이 제도는 기업에 고용된 법률 전문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격을 띤다 [^15].

신디쿠스 변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변호사 협회로부터 특별 인가 (Zulassung)를 받아야만 'Syndikusanwalt'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35]. 이를 위한 핵심 요건은 **고용 계약 서상에 직업적 독립성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신디쿠스 변호사는 소속된 기업의 구체적인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 인가를 받은 신디쿠스 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보호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 **EU 경쟁법:** 유럽연합(EU) 경쟁법 조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Akzo Nobel 판례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법률 자문은 ACP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 **형사 절차:** 기업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신디쿠스 변호사는 증거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6]. 이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타 협점을 찾으려는 독일 모델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신디쿠스 변호사 제도는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진일보한 시도이지만, ACP의 보호 범위는 형사 절차나 EU 경쟁법 조사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독일 모델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 분석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제도와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되기도 한다 [^26].

5.2. 벨기에: 대안적 접근 모델

벨기에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비밀유지권(A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도 독자적인 대안적 접근법을 채택한 국가로 주목받는다. 이는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 법무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벨기에 모델은 프랑스와 같이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사내변호사에게 완전한 변호사 지위를 부여하는 급진적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호사 단체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모색했다 [^1] [^25].

가. 도입 배경 및 연혁: 하이브리드 모델의 탄생

벨기에의 접근법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고용된 법률 전문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규율을 받을 경우, '변호사'와는 구별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15]. 이러한 배경에서 벨기에는 2000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사내변호사 협회 (Institut des juristes d'entreprise, IJE)****를 설립하였다. 이 협회에 소속된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자문서에 대해 법적으로 '**기밀성(confidentialité)**'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는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자는 급진적 제안이 변호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던 프랑스의 경험과는 대조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 [^7].

나. 주요 내용 및 법적 근거

벨기에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0년 3월 1일 제정된 ****「사내변호사 직업 보호를 위한 사내변호사 협회 설립에 관한 법(Loi du 1er mars 2000 créant un Institut des juristes d'entreprise en vue de la protection du titre et de l'exercice de la profession)」****이다. 이 법은 사내변호사가 독립적인 전문 기관인 IJE에 등록하고, 그 윤리 규범

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법률 자문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우회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에서 논의되었던 '기업 내 변호사 (avocat en entreprise)' 신설 제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5]. 프랑스에서 제58-1조가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과 같이, 벨기에 법률은 IJE 소속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기밀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2].

다. 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벨기에 모델은 변호사 직업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사내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Akzo Nobel* 판결 이후에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6]. ECJ는 EU 경쟁법 조사 절차에서는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의 독립성이 부족하므로 ACP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벨기에 법원은 이를 EU 경쟁법에 한정된 판결로 해석하고,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는 자국의 독자적인 사내변호사 기밀성 보호 제도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사내변호사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입장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3]. 비록 벨기에의 제도가 제공하는 보호가 변호사의 완전한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와는 구별되는 제한적인 보호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이는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했다 [^37].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제도는 프랑스와 같이 국제 표준에 근접하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한 모델로 볼 수 있다 [^26]. 이는 사안에 따라 판례가 충돌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는 프랑스 사법부의 태도와도 대조적이다 [^24].

5.3. 영국: 법률전문가 특권(LPP) 모델

영국의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은 유럽의 ACP 논의에서 핵심적인 비교 모델로 기능한다. 이는 영미법계의 'legal privilege' 개념을 대표하는 제도로써, 대륙법계 국가들의 제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8] 영국 모델은 사내변호사를 포함한 자격 있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ACP 도입을 논의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다. [^39]

프랑스가 ACP 도입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프랑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4] 영국 기업들은 LPP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전략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 기업의 동일한 문서는 보호 없이 규제 당국에 제출되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기업이 영국,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경쟁국에 비해 명백한 불리함에 처해 있음을 의미했다. [^11]

그러나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영국의 LPP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CJUE)는 2010년 **Akzo Nobel 판례**를 통해, EU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LPP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19] [^6] CJUE는 LPP의 근거가 변호사의 ***완전한 독립성***에 있다고 보았으며, 고용 관계에 있는 사내변호사는 이러한 독립성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40]

결론적으로, 영국의 LPP 모델은 프랑스가 ACP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제 표준의 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영국 LPP는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의 범위를 특정 임직원 그룹으로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프랑스의 새로운 ACP 제도가 '지시/자문 권한이 있는 특정 임직원 그룹'으로 한정된 것과 대조된다. [^41] 따라서 프랑스의 신설된 제도는 영국 모델에 근접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강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6]

5.4. 비교 분석 종합: 각국 모델의 특징과 한국 도입을 위한 함의

유럽 주요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 비교 분석은 각국이 처한 법률 문화와 산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상이한 해법을 모색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프랑스의 신설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제도 도입 논의에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주요국의 모델과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국 모델은 보호 주제, 대상, 예외 조항 등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였다. [^3] [^1] 이러한 법적 공백은 특히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4]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입된 프랑스의 신규 제도는 기존 법률 제58조가 사내변호사의 존재를 규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신설된 제58-1조를 통해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12]

그러나 프랑스의 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과거 사내변호사에게 일반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7]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국제 표준에 근접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강도와 범위 면에서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며, 독일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제한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26]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ACP 제도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독일 모델**은 사내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를 제한하여 국가 형사사법권과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 **벨기에 모델**은 변호사 직업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사내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한국이 ACP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처럼 각국 모델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법률 현실과 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즉,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보호되는 자문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 및 조세 등 공익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어떠한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유럽 주요 국가별 사내변호사 ACP 제도 비교표

비 교 항 목	프랑스 (France)	독일 (Germany)	벨기에 (Belgium)	영국 (United Kingdom)
보 호 주 체 (사 내 변 호 사 지 위)	법학 석사 학위 이상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기 업 소속 법률가 (Juriste d'entreprise). 변호사 자 격 불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 고 기업과 고용 관계를 맺은 사내변호사 (Syndikusrechtsanwalt).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기업 변호사' (Institut des juristes d'entreprise, IJE/IBJ).	변호사 자격을 소 지하고 기업에 고 용된 사내변호사 (In-house Lawyer).

비 교 항 목	프랑스 (France)	독일 (Germany)	벨기에 (Belgium)	영국 (United Kingdom)
보 호 대 상 (자 문 의 범 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 공된 서면 또는 구두 법 률 자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법률 자문 전반.	기업 변호사가 직무상 작 성한 모든 법률 자문서.	소송 또는 법률 자 문을 목적으로 작 성된 커뮤니케이션.
주 요 예 외 조 항 (형 사, 조 세 등)	형사 절차 및 조세 관련 절차에서는 보호가 적 용되지 않음.	경쟁법 위반 조사 및 형 사 절차에서는 보호가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음.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	범죄나 사기 목적 의 자문(crime- fraud exception)에 는 적용되지 않음.
법 적 근 거	법률 제2023-1059호 (Loi n° 2023-1059), 제 58-1조 신설. [^12]	독일 변호사법 (BRAO), 형사소송법 (StPO) 등.	2000년 3월 1일 법률 (IJE/IBJ) 설립 및 권한 부 여).	판례법(Common Law)을 통해 확립 된 '법률 자문 특권 (Legal Advice Privilege)'.
도 입 방 식 의 특 징	변호사 단체의 반발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구 별되는 '기업 법률가'의 자문에 한정된 보호를 신설. [^7]	변호사 자격 보유를 전 제로 독립성을 강조하 며, 특정 영역(형사)에 서 보호를 제한하는 타 협적 모델.	변호사 협회와는 별개의 '기업 변호사 협회'를 설 립하여 독립성과 비밀유 지 의무를 부여하는 독자 적 모델.	전통적인 판례법에 근거하여 외부 변 호사와 동등한 수 준의 강력한 보호 를 인정. [^4]

제6장. 결론: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

본 보고서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배경, 과정, 그
리고 그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한 법률 환경과 기업

현실을 고려한 사내변호사 ACP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프랑스는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자국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문제를 겪었다. [^3] [^4] 한국 역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보호는 단순한 변호사 직역의 이익을 넘어, 기업의 준법경영을 촉진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33] 따라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정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ACP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 **둘째, 변호사 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은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7]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프랑스 법조계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국 역시 변호사의 독립성과 직역 수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1] 따라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프랑스의 '기업 내 변호사 (avocat en entreprise)'와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사내변호사에게 제한적으로 ACP를 부여하는 단계적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혹은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벨기에의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변호사 직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15]
- **셋째, ACP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호받는 자문의 주체(변호사 자격 소지), 내용(법률적 자문에 한정), 형식(비밀문서 명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가의 형사사법권 등 중요한 가치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독일이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를 제한하여 타협점을 찾으려 한 것처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 가능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프랑스가 법률 분야의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법치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3]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유럽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변호사 단체, 기업,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ACP 모델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준법경영을 내실화하고 국가 전체의 법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6.1. 연구 결과 요약 및 핵심 시사점

본 보고서는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논의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와 평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ACP 도입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이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 이러한 법적 현실은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4] 특히 미국 법무부(DOJ)의 역외관할권 행사나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급습 조사(dawn raid)와 같은 국제적 법률 분쟁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은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PP)을 통해 민감한 내부 법률 문서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ACP 도입이 프랑스 기업의 생존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42]

- **둘째, ACP 도입은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도 도입 이전,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규제 당국의 조사 시 압수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사내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보호받는 법률 전문가로서 기업 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법률 리스크 분석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문제를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 **셋째, 유럽 각국의 상이한 접근법은 ACP 제도의 다양한 모델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국의 광범위한 보호 모델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 활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벨기에 모델은 전통적인 변호사 직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반면 독일 모델은 사내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형사사법권 유지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향후 국내에서 관련 제도를 논의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6.2. 한국형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정책 제언

유럽, 특히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1]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 기업들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으며, 결국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한국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정책적, 실무적 차원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법적 제언: ACP 보호를 위한 입법 모델의 구체화

한국형 사내변호사 ACP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될 법률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보호의 주체와 범위, 그리고 핵심 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보호 주체(어떤 자격의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제도의 실효성과 변호사 직역의 고유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프랑스에서 사내변호사에게 외부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던 시도가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7] 따라서 벨기에가 제시한 대안적 접근법처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로서 특정 윤리 규범 및 교육 의무를 이수하는 사내변호사에게만 ACP를 인정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고용된 법률 전문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호사협회 등록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유사한 접근이다. [^15] 또한, 법 시행 시 일정 경력을 갖춘 사내변호사를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 **보호 범위(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보호의 범위는 '법률 자문(Legal Advice)'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한정해야 한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사업 관련 커뮤니케이션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내부적으로 생성된 민감한 법률 리스크 분석 자료나 법적 전략 문서가 주요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ACP가 부재할 경우, 규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들이 기업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어 국제 경쟁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4]
- **핵심 예외 조항(한국 실정에 맞는 예외는 무엇인가):** ACP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익적 가치와의 조화를 위해 명확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 특히 프랑스 사례처럼, **형사 절차 및 조세 관련 절차에서는**

ACP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또한, 범죄나 사기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법률 자문이 이용된 경우(crime-fraud exception)에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2) 정책적 제언: 제도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성공적인 제도 도입은 법률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ACP 도입의 경제적 효과 및 필요성 홍보:**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을 법률 분야의 '저개발 상태'로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33] 정부는 통계와 경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ACP 도입이 기업의 준법경영(Compliance) 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프랑스가 ACP 부재로 인해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로 남았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3]
-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 및 역할 재정립:** 변호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ACP 도입이 외부 변호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전적 법률 자문 수요를 증대시켜 전체 법률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ACP가 적용되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3) 실무적 제언: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 및 사내변호사의 준비

법과 정책이 마련되면, 이를 실제 업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기업과 사내변호사는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전사적 교육 및 내부 가이드라인 구축:** 제도가 도입되면, 사내변호사는 물론 경영진과 현업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의 요건, 보호 범위, 그리고 형사 및 조세 문제와 같은 명백한 한계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43] 또한,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 문서와 일반 비즈니스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 생성, 보관,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 **사내변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ACP 도입은 사내변호사를 단순 법률 검토자에서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내변호사 스스로도 이러한 역할 변화를 인지하고,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내변호사의 독립적인 법률 자문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적 의견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비밀보호권(ACP) 도입 배경과 법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와 평가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명백한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제도의 실효성 평가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주로 법률 개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예측 가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제도의 실질적인 집행 및 사법적 판단이 축적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그 실효성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여 기업에 고용된 사내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 중 하나였다. [^3] [^1] 이러한 오랜 법률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는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 시 디지털 봉인(scellé fermé)과 같은 절차적 보호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조사 환경에서 기업이 실시간으로 보호 대상을 식별하고 이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44]

- **둘째, 보호 범위의 본질적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ACP 제도는 그 보호 범위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자는 제안은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7] 이러한 타협의 산물로, 최근의 입법 시도는 형사 및 조세라는 핵심적인 리스크 영역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쪽짜리 특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8] 이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 기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4] 제안된 해결책은 형사 및 조세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기밀성’을 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 관리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 [^45]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다.

- **우선,**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인 판례와 법 집행 사례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법원이 ACP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추적 연구해야 한다.
- **또한,** 형사 및 조세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실무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제도의 명백한 한계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벨기에나 독일과 같은 대안적 모델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프랑스 실정에 맞는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Article 66-5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23780802 [^2]: Le secret professionnel en France : un privilège réservé ... - Jones Day,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jonesday.com/-/media/translated-sites/french/pubfranceslegalprivilegeonlyforattorneysatlawnotinhousecounselwhitepaperfr2401341.pdf?rev=579f9327013c4d7a88ff7d57b9b0ad6c> [^3]: Règlement Intérieur National de la profession d'avocat (RIN) - Grande Bibliothèque du Droit,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gbd.org/images/c/ca/Rin_2021-01-18_consolidefinal.pdf [^4]: Le secret professionnel en France : un privilège réservé ... - Jones Day,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jonesday.com/-/media/translated-sites/french/pubfranceslegalprivilegeonlyforattorneysatlawnotinhousecounselwhitepaperfr2401341.pdf?rev=579f9327013c4d7a88ff7d57b9b0ad6c> [^5]: Rapport Darrois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 Ministère de la justi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justice.gouv.fr/documentation/ressources/rapport-darrois-professions-du-droit> [^6]: Germany: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nd Implied Undertaking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de-de/wissen/publications/7fd309be/germany-legal-professional-privilege> [^7]: 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 Ministère de la justi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art_pix/rap_com_darrois_20090408.pdf [^8]: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Légifrance,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508793> [^9]: Garanti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at.fr/leg/pp123-126.html> [^10]: Appréciation in concreto permettant de bénéficier de la protection du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navacelle.law/fr/appreciation-in-concreto-des-pieces-et-documents-permettant-de-beneficier-de-la-protection-du-secret-professionnel-de-lavocat/> [^11]: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juridiques - AFJ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afje.org/info/la-confidentialite-des-avis-juridiques> [^12]: Garantir la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juridiques : adoption au Séna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professions/238-avocat/91455-garantir-la-confidentialite-des-consultations-juridiques-adoption-au-senat.html> [^13]: Tribune collective "Legal privilege : le risque d'un bond en arrière" - Barreau de Lyo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barreaulyon.com/espace-particuliers/actualites/actualites-du-barreau/tribune-collective-legal-privilege-le-risque-dun-bond-en-arriere/> [^14]: LE CONSEIL JURIDIQUE : EXERCICE EN ENTREPRISE, SECRET PROFESSIONNEL ET RÉDACTION D'ACTES, - Juriscope,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juriscope.fr/wp-content/uploads/sites/74/2022/06/Juriscope_JuristesEntreprise_2018.pdf [^15]: Avis sur le secret professionnel du juriste d'entreprise,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bj.admin.ch/dam/bj/fr/data/publiservice/publikationen/externe/gutachten-berufsgheimnisschutz-f.pdf.download.pdf/gutachten-berufsgheimnisschutz-f.pdf> [^16]: Pourvoi n°22-19.285 | Cour de cassatio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ourdecassation.fr/en/decision/65701d1b604055831871b025> [^17]: Le CNB s'oppose à la reconnaissance de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institutions/88074-cnb-soppose-reconnaissance-confidentialite-avis-juristes-entreprise-legal-privilege.html> [^18]: Le secret professionnel en France : un privilège réservé ... - Jones Day,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jonesday.com/-/media/translated-sites/french/pubfranceslegalprivilegeonlyforattorneysatlawnotinhousecounselwhitepaperfr2401341.pdf?rev=579f9327013c4d7a88ff7d57b9b0ad6c> [^19]: Tribune collective "Legal privilege : le risque d'un bond en arrière" - Barreau de Lyo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barreaulyon.com/espace-particuliers/actualites/actualites-du-barreau/tribune-collective-legal-privilege-le-risque-dun-bond-en-arriere/> [^20]: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 Dossiers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dossiers/confidentialite_consultations_juristes_entreprise [^21]: Secret professionnel des avocats : quelle protection en droit français - Le Club des Juriste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leclubdesjuristes.com/opinion/secret-professionnel-des-avocats-quelle-protection-en-droit-francais-7301/> [^22]: Germany: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nd Implied Undertaking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de-de/wissen/publications/7fd309be/germany-legal-professional-privilege> [^23]: Règlement Intérieur National de la profession d'avocat - RIN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nb.avocat.fr/fr/reglement-interieur-national-de-la-profession-davocat-rin> [^24]: L'incidence de la réforme du secret professionnel des avocats sur le droit pénal des affaire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navacelle.law/fr/reforme-du-secret-professionnel/> [^25]: Pourvoi n°22-19.285 | Cour de cassatio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ourdecassation.fr/en/decision/65701d1b604055831871b025> [^26]: 03 - Scope of privilege | Germany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germany/topics/03---scope-of-privilege> [^27]: LOI n° 2023-1059 du 20 novembre 2023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2023-2027 (1) - Légi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430512> [^28]: Règlement Intérieur National de la profession d'avocat (RIN) - Grande Bibliothèque du Droit,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gbd.org/images/c/ca/Rin_2021-01-18_consolidefinal.pdf [^29]: AVIS - du Haut Comité Juridique de la Place financière de Paris (HCJP) L'avocat en entreprise - Banque de 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banque-france.fr/system/files/2023-10/avis_10_f.pdf [^30]: REGLEMENT INTERIEUR DU BARREAU DE PARI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vocatparis.org/sites/bdp/files/2025-03/Articles_modifif%C3%A9_MAJ%20D.juin_23.pdf [^31]: AVIS - du Haut Comité Juridique de la Place financière de Paris (HCJP) L'avocat en entreprise - Banque de 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banque-france.fr/system/files/2023-10/avis_10_f.pdf [^32]: AVIS - du Haut Comité Juridique de la Place financière de Paris (HCJP) L'avocat en entreprise - Banque de 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banque-france.fr/system/files/2023-10/avis_10_f.pdf [^33]: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d'entreprise est plus que jamais primordiale selon l'AFJE - LE MONDE DU DROIT,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lemondedudroit.fr/juriste/82199-confidentialite-avis-juristes-entreprise-est-plus-que-jamais-primordiale-afje.html> [^34]: Germany: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nd Implied Undertaking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de-de/wissen/publications/7fd309be/germany-legal-professional-privilege> [^35]: Privileged to be a lawyer? A German perspective on privileg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immons-simmons.com/publications/ck0b3xgdnvdt0b33lg1s0tbw/06-privileged-to-be-a-lawyer-a-german-perspective-on-privilege> [^36]: Avis sur le secret professionnel du juriste d'entreprise,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bj.admin.ch/dam/bj/fr/data/publiservice/publikationen/externe/gutachten-berufsgheimnisschutz-f.pdf.download.pdf/gutachten-berufsgheimnisschutz-f.pdf> [^37]: Article 58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Légifran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06903388 [^38]: Le secret professionnel en France : un privilège réservé ... - Jones Day,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jonesday.com/-/media/translated-sites/french/pubfranceslegalprivilegeonlyforattorneysatlawnotinhousecounselwhitepaperfr2401341.pdf?rev=579f9327013c4d7a88ff7d57b9b0ad6c> [^39]: Privilege under English law: The rules and definitions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us/knowledge/publications/6c6dfda0/privilege-under-english-law> [^40]: Article 66-5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23780802 [^41]: Privilege under English law: The rules and definitions - Norton Rose Fulbright,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us/knowledge/publications/6c6dfda0/privilege-under-english-law> [^42]: Secret professionnel des avocats : faut-il une nouvelle loi pour renforcer sa protection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Secret-professionnel-des-avocats,18408.html> [^43]: Rapport Darrois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 Ministère de la justic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justice.gouv.fr/documentation/ressources/rapport-darrois-professions-du-droit> [^44]: Appréciation in concreto permettant de bénéficier de la protection du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navacelle.law/fr/appreciation-in-concreto-des-pieces-et-documents-permettant-de-beneficier-de-la-protection-du-secret-professionnel-de-lavocat/> [^45]: Tribune collective "Legal privilege : le risque d'un bond en arrière" - Barreau de Lyo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barreaulyon.com/espace-particuliers/actualites/actualites-du-barreau/tribune-collective-legal-privilege-le-risque-dun-bond-en-arriere/>